

## ‘적벽대전 일단락’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 화순군에 이양

망향정 일대 5km 구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 이양 결정

21일 화순군 찾아 협약 일정 조율...19년 만 갈등 일단락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전남 화순 동북면 적벽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 이양 문제를 놓고 19년간 이어져 온 광주시와 화순군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북면 주변 적벽을 바라 볼 수 있는 망향정 일대 5km 구간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권을 화순군에 이양한다.

광주시는 21일 화순군청에서 전남도·화순군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화순군이 요청한 주민지원금 등 일부 세목 항목에 대한 협의도 이어졌다. 모든 협의가 마무리되면 관리권 이양 협약 일정을

조율한다.

광주시의 결정은 지난 7월 열린 2022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동북면 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전남도와 적극 협력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화순적벽은 동북면 상류로부터 7km 구간에 걸쳐 형성된 절벽(노루목적벽)으로, 중국 적벽에 버금간다고 해 적벽으로 불리고 있다. 2017년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112호로 지정됐다. 동북면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적벽은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됐다

2014년 10월 광주시와 화순군의 상생합의로 30여년 만에 개방됐다.

동북면은 1971년 화순군 이서·동북·북면 일원에 건설됐다. 1973년 5월 일대 1만2656km<sup>2</sup>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1981년 1차 증축·1985년 2차 증축을 거쳐 저수용량 9900만t의 상수원으로 자리잡았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전남도지사는 광주시를 관리자로 지정했으며, 2003년 3월 환경부도 광주시를 관리권자로 인정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권 분쟁이 처음 시작

된 것은 2003년 2월 화순군이 환경부에 관리주체 조정을 요청하면서부터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이 그 배경이었다.

화순군은 2017년에도 광주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동북면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주체를 화순군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화순적벽 입구나 도로 주변의 철조망 펜스를 철거하고 광주시와 화순군이 공동으로 근무자(청원경찰)를 배치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150만 광주시민의 상수원인 동북면의 수질 오염과 상수원보호구역 부실관리 등이 우려된다며 관리주체 조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광주시민의 주요 상수원인데다, 토지의 대부분을 광주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관리자는 광주시였다는 논리와 함께 화순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갈등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홍수조절 실패로 동북면을 비롯한 4개 면이 극심한 침수피해를 입으면서 다시 불거졌다. 당시 화순군의회는 광주시를 항의방문, 상위법에 맞지 않는 ‘광주시 상수도동북면 관리규정’을 지적하고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대책 등 5개 항을 요구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망향정 일대 관리권을 화순군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며 “광주시민의 상수원인 동북면 수질보전 문제에 대해서도 화순군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무등산 장불재 위역새

20일 오전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장불재에 역새가 피어있다.

## “꿈수 건립 의혹, 동물 화장장 반대...주민 피해 우려”

광주 광산구 양동 주민,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의혹 제기

화장터 용도 변경 심의 중...“운영 여부 승인 거처야”

광주 광산구 주민들이 한 민간업체가 사무실 ‘꿈수’ 용도 변경으로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시도한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광주 광산구 양동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 반대 대책위(대책위)는 2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광산구 양동 소재 A업체가 지난 5월 지

은 사무실을 반려동물 화장장으로 쓰겠다며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사무실은 화장 시설 하가를 쉽게 하기 위한 ‘꿈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반려동물 화장장이 들어설 경우 반경 300~500m 내 주민들이 생명·환경·재산상 피해를 입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A업체의 전 대표이사는 과거에도 불법 반려동물 화장터를 운영하다 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며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화장장 영업 신청 자격이 박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대표이사는 화장장 영업을 하고자 지난 4월 등기 서류 상으로만 대표를 사임했다”고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용도 변경 없이 화장터를 운영했다면 불법이지만 개인의 용도 변경 신청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용도 변경이 받아 들여지더라도, 화장터를 운영하려면 관련 부서의 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 도시개발분과위원회는 환경·소방 전문가 등과 함께 오는 22일 2차 심의를 열고 A업체의 반려동물 화장장 용도 변경이 적합한 지를 따진다. 임형택 기자

## 금감원, 5.6조 태양광 대출 들여다본다

은행권 대대적 검사로 변질 가능성도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2017년 이후 5조6000억원 규모로 이뤄진 은행권의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각 은행들로부터 태양광 대출 종류와 건수, 금액, 담보물 평가액 등 관련 자료를 받아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태양광 대출이 여러 갈래여서 일단 자료를 금융회사들로부터 받아보려고 준비 중”이라며 “정책자금 대

출, 지자체 협약 대출, 은행 자체 상품, 일반 여신 대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태양광 대출이 어떻게 얼마나 있는지 자료 파악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게 현상을 파악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은 점검이나 검사를 말할 단계는 아니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일단 현황 파악 차원이라고 했지만 정부·여당이 전 정권을 겨냥한 태양광 비리 의혹 총공세에 나선 만큼 부실 징후가 포착될 경우 은행권에 대한 대대적 검사로 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취재본부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통합의학 치유와 힐링을 담다

# 2022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 KOREA INTEGRATIVE MEDICINE FAIR 2022

2022. 9. 30.(금)-10. 4.(화) 5일간 |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주최 |

전라남도  
JeollaNamdo

장흥군

Jangheung County

주관 |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추진위원회